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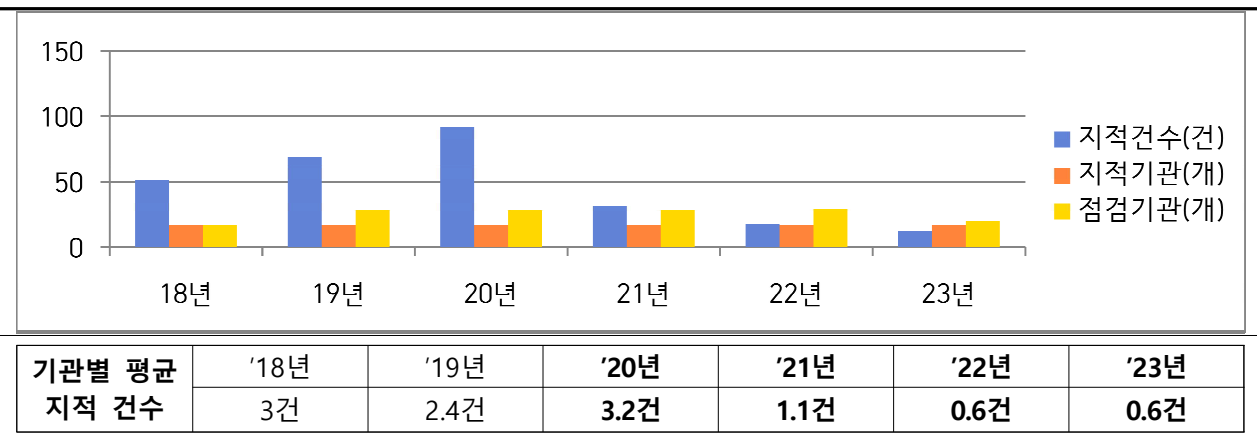
2024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

I 조사 개요

1. 추진 배경

- 공직사회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「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」 추진 중
- 2023년부터는 권익위 계획에 따라 그간에 채용비위 감소 경향 등을 반영하여 필수·재량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하여 점검 실시

< 우리부 주관,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('18년~'23년) >



2. 조사범위 및 대상기관

- (조사범위) 23년 기간 중, 우리부 소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등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
- (대상기관) 28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평가 유무 및 채용관련 처분현황 등을 반영하여 필수조사와 재량조사 기관으로 분류
 - (필수조사) 기재부 '경영평가' 대상 공공기관 및 채용관련 최근 3년간 '징계' 처분요구 발생기관 등 4개 기관(매년 조사)
 - (재량조사) 최근 3년간 적발이 없었던 기타공공기관(3년 주기), 경미한 위반기관 중 '23년 조사 미실시(2년 주기) 등 4개 기관

< 조사유형별 대상기관 및 2023년 채용현황 >

연번	기관명	기관유형	채용 인원	정규직		비정규직		전환직		조사유형
				건수	인원	건수	인원	건수	인원	
총 계			449	32	214	47	227	1	8	-
1	해양환경공단	공기업	61	4	22	6	39	-	-	필수(경평)
2	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	준정부기관	82	4	39	7	43	-	-	필수(경평)
3	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	기타공공기관	58	2	16	5	42	-	-	필수(징계*)
4	울산항만관리(주)	공직유관단체	26	5	26	-	-	-	-	필수(신규**)
5	한국해양진흥공사	기타공공기관	31	2	4	4	27	-	-	재량(정기)
6	수협중앙회	공직유관단체	121	1	68	15	45	1	8	재량(정기)
7	한국해운조합	공직유관단체	69	13	38	10	31	-	-	재량(정기)
8	해사위험물검사원	공직유관단체	1	1	1	-	-	-	-	재량(정기)

* '21년 채용실태 조사 시 시험위원 회피·기피제도 미준수를 사유로 징계처분 요구

** 기관 설립 이후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권익위에서 필수조사기관으로 지정·통보

3. 조사기간 및 조사반 편성

- ☐ (조사기간) 2024. 2. 1. ~ 2024. 4. 19.
- ☐ (조사반 편성) 감사담당관실 주관 **4개조로 편성**(반별 2개 기관)
- ☐ (조사방법)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**1차 서류점검** 및 **2차 현장조사**를 실시하되, 필요시 정기종합감사와 병행 추진

4. 점검 중점사항

- ☐ (계획수립) 응시자격 자의적 설정,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채용 여부,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여부, 감독부처 사전협의 등
- ☐ (공고·접수) 당초 계획과 공고 상 응시자격 동일 여부,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여부, 채용 변경 시 내부심의 절차 준수 여부 등
- ☐ (서류·면접) 시험위원 위촉 공정성 및 회피·기피제도 적용 여부 등
- ☐ (합격자 결정) 채용계획·공고에 따른 합격자 결정 시 응시 자격,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여부

II

조사 결과

1. 총 평

□ 4개 기관에서 총 4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으며, 전년 대비 기관별 평균 지적건수('23년 0.6건 → '24년 0.5건)는 감소함

- 지적사항이 징계에 이르는 비위는 아니었으나, 채용절차를 일부 부적정하게 이행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(경고 4명, 주의 9명),
- 그 밖에 가·감점 적용 및 응시자격 충족시점이 불명확한 사항 등에 대해 행정상(기관경고 및 통보 등 6건) 조치함

◆ 매년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통해 지적사항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부 공공기관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□ 주요 지적사항

- ① **[채용절차 부적정]** 응시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, 면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지 아니함 (해운조합 ☞ 기관경고 1건, 관련자 “경고 4명, 주의 5명”)
- ② **[제도개선 등]** 서류전형 시 가점 기준, 응시자의 자격 충족시점 및 블라인드 채용 위반자(응시자)에 대한 불이익 기준 등이 미비함 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, ☞ 통보, 개선 등 6건)

2. 지적사항 총괄

구분	지적 건수 (건)	처분건수									
		행정상 조치(건)						신분상 조치(명)			
		계	기관 경고	기관 주의	통보	개선	권고	계	경징계	경고	주의
계	4	6	1	1	3	1	-	13	-	4	9
공공기관	2	3	-	1	2	-	-	-	-	-	-
공직유관단체	2	3	1	-	1	1	-	13	-	4	9

3. 지적사항 요약

필 수 조 사

① 서류전형 평가 시 가·감점 적용 기준 불명확 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

- 채용 공고 시 블라인드 채용지침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안내하였으나, 불이익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서류전형 심사위원들간 협의를 통해 감점 처리함

* '23. 10월(6차 채용)부터는 블라인드 채용 위반시 2점을 감점토록 했으나, 동 기준도 자체 정성평가 심사기준(미흡으로 평가)에는 부합되지 않음

-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르면 채용별로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으나, 공단 지침에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함

➔ (행정상) 블라인드 채용 위반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정성평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, 이사장 방침에 따른 가점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구(통보 1)

②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 및 연간 채용계획 미공개 (해양환경공단)

-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①임용 즉시 승전이 가능한 자, ②면접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(검진, 교육포함), ③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의 충족시점이 명확하지 않음

*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교육훈련, 건강진단은 미충족. 다만, 면접전형 이후 서류 제출 시 승전 가능 증빙자료를 제출한 2명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 처리함

- 「공기업 경영지침」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, '23년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, 채용이 시작된 이후 종합계획('23. 5.)을 수립함

➔ (행정상) 응시자격 충족시점을 명확히 공고하도록 요구(통보 1)

➔ (행정상) 종합계획 지연 수립, 미공개 사항에 대해 “주의”(기관주의 1)

③ 채용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[울산항만관리]

- 「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가이드 라인」에 따라 전형별 외부 심사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나, 내부적으로 서류전형 외부위원을 1명 이상으로만 규정함(2번의 채용에서 외부위원 과반수 미만)

➔ (행정상)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(개선 1)

재 랑 조 사

④ 채용절차(불필요 정보 요구 등) 미준수 [해운조합]

- 「공정채용절차법*」 등에 따르면 응시자에게 직무에 필요없는 출신 지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나, 4차례** 채용에서 지원서상 응시자의 본적(등록기준지) 등을 기재하게 함(심사위원에게도 제공)

* 직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(용모 등 신체조건, 출신지역 등)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토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, 1회 위반시 3백만원 과태료 처분

** 나머지 23번의 채용과정에서도 응시자의 사진, 학교명, 전공, 생년월일 등을 요구함

- 한편, 면접심사 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나, 2차례(지부)의 채용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음

➔ (행정상) 표준 입사지원서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요구(통보 1)

➔ (행정상) 응시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“경고” (기관경고 1)

➔ (신분상) 채용절차법 등 위반 관련자(13명)에게 신분상 처분 요구 (경고 4, 주의 9) * 채용절차법 위반사항은 관할 노동지청에 과태료 처분 요구 병행